

주간 통일정세

2015-11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보수단체 김정은 모욕 비난…“무자비한 징벌”(3/10,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0일 서기국 보도에서 보수단체들이 최근 서울 한복판에서 '최고존엄 모독'을 했다고 하며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모독하는 자들에게 차례질(돌아갈) 것은 무자비한 징벌뿐"이라고 위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또한 조평통은 북한군과 주민들이 "극악한 모략의 소굴들을 산산이 폭파해버리고 역적패당과 그 썩나풀들을 씨도 없이 죽탕쳐버릴 멸적의 의지로 피를 끓이고 있다"고 경고하며 김기종 씨의 리퍼트 대사 공격이 "미국에 대한 남조선 인민의 한결같은 분노와 항거의 표시"이자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의로운 행동"이라고 거듭 주장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미국은 악랄한 해커 제국…멸망할 운명"(3/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범죄적인 사이버공격과 그 주범'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은 첫 국가급 사이버공격 행위를 감행한 주범, 사이버공간을 전쟁마당으로 전변시키는 악랄한 해커 제국"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북한의 소니 해킹 의혹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 자기 나라가 사이버공격의 최대 피해자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은 저들의 범죄행위를 가리기 위한 꾀변"이라고 비난함.
 - 매체는 또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아시아를 외교 중심축으로 삼고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한 '국가안보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북핵 위협설'을 구실로 삼고 있다고 비난함.

- 북한 "한반도 핵전쟁 위기 조성 장본인은 미국"(3/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의 대외선전단체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가 9일 최근 시작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거론하며 미국이 핵전쟁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했음을 보도함.
 - 뉴스는 단체가 9일 발표한 '미국의 죄악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백서에서 미국이 "규탄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침 핵전쟁 연습을 강행했다"며 "이러한 핵전쟁 광신자, 핵범죄자가 누구의 '핵위협'을 떠들어대는 것은 파렴치와 철면피의 극치"라고 주장했음을 전함.
 - 단체는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연합 군사훈련을 '핵전쟁 불장난'으로 규정하면서 훈련들이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과 공같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함.

- 북한, 김기종과 연관성 거듭 부인... "증상모략"(3/1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0일 논평에서 이번 사건은 피습을 저지른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씨의 주장처럼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 등에 대한 항거와 울분의 표시"라고 주장함.
 - 통신은 이어 청와대, 정부, 여당이 피습에 대해 '배후세력'과 '중북주의'를 거론하며 북한을 걷고 들고 있다면서 이는 "통일애국세력을 전멸하고 반공화국 모략소동에 더욱더 매달리기 위한 기도"라고 비난함.
 - 통신은 "남조선 당국이 기회를 이용하여 북남대결의 골을 더더욱 깊이 파고 있는 것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가련한 행위"라면서 "보수패당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함.

- 북한 "한국·미국이 대화파괴...군사대결만 남아"(3/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5면의 '남은 것은 오직 힘에 의한 최후결판뿐이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선의에 악랄하게 도전한 남조선피뢰호전광들과 더 상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내린 결론"이라고 밝힘.
 - 논설은 남한이 '키 리졸브', '독수리' 연합군사훈련을 개시해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완전히 차버렸다고 "북남관계에서 남은 것은 오직 최후의 결판, 군사적 대결뿐"이라고 강조함.

- 북한 "남한 보수단체 최고존엄 모독...피의 대가"(3/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특대형 범죄의 대가를 피로써 치르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극우보수들이 무엄하게도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중상모독하는 치 떨리는 난동을 부린 것"이라고 비난함.
 - 노동신문은 다른 글에서는 국방부가 지난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한 것에 대해 키 리졸브 등 한미연합훈련을 언급하며 "조소를 자아내는 도발자들의 생역지"라고 주장하며 남한과 미국이 "(북한의) 신성한 영해, 영토, 영공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 혁명무력은 도발자들을 가차없이 쓸어버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음.

- 북한, 한미훈련 또 위협... "반미성전 불길 지펴야"(3/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월 초 시작된 키 리졸브와 독수리 등 연례 한미 합동훈련에 대해 "미국의 대조선지배 전략 실현을 위한 책동의 일환으로 북침전쟁 도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함.
 - 이어 신문은 한미가 '연례적 방어훈련'이라고 취지를 설명한 데 대해 오바마의 지난 1월 '북한 붕괴' 발언 등을 거론하며 "그것을 끝이 믿을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폄하함.
 - 매체는 또 다른 기사에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적대시 정책이 극도에 이른 상황이 "총대를 더욱 강화하고 국력을 보다 튼튼히 다져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선군정치와 핵·경제 병진노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함.

- 6·15 북측위 "남한 각계 한미훈련 반대해야" 선동(3/13, 조선중앙통신)
 -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13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민심의 '항거'라며 남한 각계가 군사훈련 반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변인 성명에서 "남조선의 각계층은 미국과 괴뢰패당의 위협천만한 핵전쟁 도발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광범히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이어 성명이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터질 경우 북한이 '반미대결전'과 '조국통일대전'을 벌일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적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위협했음을 전함.

- 북한, 정종욱 '흡수통일' 발언 비난... "통준위 해체해야"(3/14, 연합뉴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4일 대변인 담화에서 "박근혜는 통일준비위원회 수장으로서 온 민족 앞에 이번 망발(정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명백히 책임적인 해명을 하고 사죄해야 하며 극악한 반통일 체제대결 모략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현 남조선 당국과 상종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그러나 조평통은 정 부위원장의 발언으로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것이 그 무슨 신뢰조성과 교류협력,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철두철미 흡수통일 모략기구이며 흉악한 체제대결의 망상을 추구하는 대결의 돌격대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난함.
 - 조평통은 "괴뢰패당이 추구하는 흡수통일은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는 미친 개꿈"이라며 "괴뢰패당이 무모한 체제대결에 계속 나선다면 우리는 우리식의 방식으로 통일대전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함.

- 북한, 핵전쟁 위협... "백악관과 청와대 조준경 안에"(3/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침략자를 징벌하는 것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백악관과 청와대를 비롯한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백두산혁명강군의 멸적의 조준경 안에 들어있다"고 위협함.
 - 이어 "우리의 신성한 영해, 영공, 영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무자비한 공격으로 도발자를 쓸어버릴 것"이라며 이러한 '최후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고 강조함.
 - 신문은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장본인은 미국과 남한이라고 책임을 돌리며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의 불집이 터지는 경우 그것은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번져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북한군, 1월 말부터 한미훈련 겨냥 실전훈련"(3/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참관 하에 진행된 1월 31일(보도 날짜)의 미국 항공모함 타격 훈련과 지난달 21일의 섬 타격·상륙 훈련을 실전훈련의 예로 꼽음.
 - 북한이 실전훈련에 돌입한 것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월 22일 유튜브 인터뷰에서 북한 붕괴를 거론해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단았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강조함.
 - 이어 매체는 한미훈련 기간 북한군이 '발사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자그마한 불꽃이라도 튀기는 경우 그것이 국지전에 그치지 않고 전면전쟁으로 확대되는 가능성을 항상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경고함.
- 北, 키리졸브 종료 전날 지대공 미사일 7발 동해로 발사(3/13, 연합뉴스)
 - 북한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키리졸브(KR) 연습 종료 전날인 12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SA계열의 지대공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3일 밝혔음을 연합뉴스가 보도함.
 - 뉴스는 합참의 한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군은 어제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SA 계열 지대공 미사일 7발을 동해로 발사해 공해상에 낙하했다"며 "이번 훈련은 김정은이 참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함.
 - 매체는 또 합참 관계자가 "SA-2와 SA-3의 사거리는 수십km였고, SA-5의 사거리는 200여km였다"며 "SA-5의 시험발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음을 덧붙임.

마. 남북 경제 관계

- 정부 "北, 개성공단 발전의지 있는지 의심스러워"(3/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정부가 9일 개성공단 임금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우리의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음을 보도함.
 - 뉴스는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이 9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아직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과연 남북이 합의한 대로 개성공단을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음을 전함.

- 매체는 또한 통일부가 "북한은 지금이라도 당장 노동규정 적용 시도를 중단하고 남북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의한 공동위원회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입주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임.

■ 정부 "개성공단 임금 낮은편 아냐"…北주장 반박(3/1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3일 통일부가 개성공단의 1인당 평균임금은 141.4달러로, 베트남(193달러)보다는 낮으나 캄보디아(120달러)나 방글라데시(74달러) 등 몇몇 외국공단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음을 전함.
- 또 북·중 경제특구가 있는 나선 지역 근로자의 임금이 월 100달러, 북한 내 외국기업 임금이 60~80유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것에 비하면 북한 다른 지역보다도 개성공단 임금이 상대적으로 후하다고 덧붙임.

■ "개성공단 임금인상, 정당한 권리…흥정 안해"(3/13, 우리민족끼리, 연합뉴스)

- 북한의 개성공단 지도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13일 '우리민족끼리' 기자와 문답에서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일방적 개정이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법제권 행사"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뉴스는 북한이 작년 11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개정해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 장치를 없앤 데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올해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다고 남측에 통보했음을 전함.
- 또한 그는 새로 정한 최저노임 기준은 높아진 우리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수준과 생산성, 다른 나라 경제특구들의 수준에 비하면 아직도 매우 낮은 형편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그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음을 매체가 보도함.

- 정부 "개성공단 공동위 무산유감…北임금인상 단호대처"(3/13, 연합뉴스)
 -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은 노동규정 개정이 우리 측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며 우리 측의 공동위원회 개최 제안을 거부하고 노동 규정 시행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고 주장했다"면서 "정부는 북한이 남북 간 합의를 무시하고 13일 공동위 개최를 무산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음을 연합뉴스가 전함.
 - 뉴스는 이어 정부는 북한의 노동규정 13개 조항 일방적 개정과 최저임금의 인상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임금을 인상하지 말고 지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바. 남북 사회 관계

- 분단 70년 맞아 남북한 대표 화가 그림 한자리에 전시(3/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세계로평화나눔문화축전조직위원회(이하 나눔축전조직위)가 오는 12~17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의 서울메트로미술관에서 '분단 70년 남북미술전-백두에서 한라까지'를 개최한다고 보도함.
 - 뉴스는 전시회가 남과 북을 대표하는 화가 70명씩의 작품 140점을 선보이며 그동안 소식이 끊겨 궁금해하던 리쾌대(경북 칠곡)·정창모(전북 전주)·정은녀(강원 사창리)·리석호(경기 안성)·정종여(경남 거창) 등 월북 화가들과 선우영·김성민·최성룡·김춘전·김승희·리창·김상직·강정남·홍춘성·황인제·김창성·리화식·최창호 등 북한을 대표하는 인민예술가·공훈예술가 70명의 그림이 전시됨을 전함.

- 6.15공동선언실천 北 여성분과委·南 여성본부, 3월 8일 「국제여성의 날(3.8)」 즈음 '전쟁반대·평화 수호운동 전개' 등 北·南·해외 전체 여성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3.8, 중앙통신·중앙방송)
- 韓美 '키 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규모 확대(美 '라센'함, 3.7-12, 해상훈련 참가 등)로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위험한 전쟁국면으로 치달고 있다'고 비난(3.8, 중앙통신)
- 리퍼트 駐韓 美대사 피습에 대한 '중복세력 용의점 수사' 관련 '사태의 책임을 공화국에 넘겨씌우려는 졸렬한 술책'이라며 '계속 여론화하여 미국이 공화국에 테러지원국 감투를 씌워놓는데 필요한 명분을 세워보려 하고 있다'고 왜곡 비난(3.9, 중앙통신·노동신문)
-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 관련 '남북관계가 보다 엄중한 파국에 처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며 '집권자가 정보원에 의거해서 통치위기를 수습하고 집권안정을 유지하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비난(3.9, 평양방송)
- KF/FE 연습 진행에 대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등 여러 시민단체들의 항의 관련 "친미사대미국과 전쟁연습소동에만 미쳐 날뛰는 남조선 괴뢰패당의 처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큰 대중적 분노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3.9, 평양방송)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86호(3.10)】 리퍼트 주한 美대사 피습 관련 보수단체들(어버이연합, 고엽제전우회 등)의 '중복세력' 규탄 집회(김정은의 인형을 각목으로 내리치는 등 반복 퍼포먼스)에 대해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훼손하는 극악무도한 망동'이라며 '우리(北)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자들에게는 차려질 것은 무자비한 징벌'이라고 위협(3.10, 중앙통신·중앙방송)
- 韓美 '키 리졸브·독수리' 군사연습 강행에 대해 '남한과는 더는 상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北)의 최종결론'이라며 "이제 북남관계에서 남은 것은 오직 최후의 결판, 군사적 대결뿐"이라고 위협(3.11, 중앙통신·노동신문)
- 리퍼트 駐韓 美대사 피습에 대한 '중복세력 주장 및 배후 조사' 등 관련 '보수패당이 중복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최고 존엄에 감히 도전해 나선 괴뢰들의 그 엄청난 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천백배로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위협(3.12, 중앙통신·노동신문)
- 어버이연합 등 시민단체들의 중복세력규탄 대회에서의 퍼포먼스와 관련하여 '최고존엄을 훼손하는 대죄악을 저지른 도발자들은 무자비한 징벌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3.12, 평양방송)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측 대변인 성명(3.13)】 리퍼트 주한 美대사 피습 사건은 '미제의 전쟁책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려는 격노한 남녘민심의 반영이고 항거의 표시'라고 거듭 강조하며 '남조선의 각계층은 핵전쟁 도발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광범히 떨쳐나서야 한다'고 선동(3.13, 중앙통신·중앙방송)
- '韓美 합동군사연습을 방관한다면 한반도에서 기필코 핵전쟁이 터지게 되리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거리는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북침전쟁연습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애국성전에 한사람같이 궤기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3.13, 중앙통신)
-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3.14), 정중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발언(3.10, ROTC 중앙회 강연)을 '불순한 속심이 들끓는 것'이라며 대통령 사과와 "통일준비위원회를 해체하지 않을 경우 현 남조선 당국과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3.14, 중앙통신·중앙방송)
- 최근 대통령과 現 정부 비판 전단지 살포 및 집회는 "파쇼독재 통치와 반인민적 악정,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정책, 북침전쟁 불장난 소동에 광분하는 박○○와 그 일당에 대한 원한과 분노의 표시"라고 주장(3.14, 평양방송)

- 韓美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 관련 '핵선제타격을 위한 전형적인 공격연습, 핵시험전쟁'이라고 지속 주장 및 '백악관과 청와대를 비롯한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혁명강군의 열적의 조준경 안에 들어 있다'며 "최후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다"고 강조(3.15,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 관련 '극악한 반통일대결광신자'로 평가하며 '험악한 남북관계가 더욱 엄중한 파국상태에 빠져도 무방하다는 괴뢰집권자의 흉악한 심보를 잘 알 수 있게 한다'고 주장 (3.15, 중앙방송)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조태열 차관 유엔인권발언 비난... "파렴치한 궤변"(3/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월 초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하며 "미국과 함께 동족을 겨냥한 대규모 북침 합동군사연습을 벌이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떠벌리고 있으니 얼마나 후안무치한 자인가"라며 비난함.
 - 신문은 남한 당국에 "진정으로 북남 사이의 인도적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파괴하는 외세와의 북침전쟁연습부터 중단해야 할 것" 이라며 "인권모략"이 계속되면 '천백 배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함.
- 미국 핵과학 전문지 "북한 핵무기 '10개 미만' 보유"(3/11, 미국의소리)
 - 미국의 핵과학 전문지 '핵과학자회보'가 북한의 보유 핵무기 숫자를 '10개 미만'으로 추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1일 존 맥클린 편집장을 인용해 보도함.
 - 방송은 맥클린 편집장이 "숫자 변경은 소속 전문가들의 추정을 단기적으로 가장

잘 전달하는 방식"이라며 "내부 논의가 끝난 만큼 (핵무기 보유량) 그래프의 북한 부분 묘사도 조만간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매체는 또한 그가 "북한이 핵실험을 무기화로 연결시켰는지 등을 보여주는 정보를 입수할 수가 없어서 실태를 정확히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10개 미만' 숫자에도 북핵 프로그램의 불확실성을 감안해야한다는 단서가 달린다"고 말했음을 덧붙였다.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특이사항 없음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북-러 외무 회동...김정은 방러 협의한 듯(3/13, 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는 13일 언론 보도문을 통해 "라브로프 장관이 모스크바에 들른 리 장관과 만났다"며 "양자관계 발전,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정세, 상호 관심사

가 되는 국제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아. 국제기구

- 북한, 유엔 안보리에 '한미훈련은 핵전쟁연습' 서한(3/10, 미국의소리)
 -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함.
 - 방송은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한국과 미국이 '합동 핵전쟁 연습'을 벌이고 있다며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유엔 안보리 의장에 보냈다고 밝힘.
 - 매체는 또한 자 대사가 이어 북한군 총참모부와 외무성이 최근 한미훈련에 관해 발표한 성명도 첨부했다며 안보리에 보낸 서한과 함께 이 성명을 안보리 공식 문건으로 채택해 회람해 달라고 요청했음을 덧붙임.

자. 기타 국가

- 북한 육해운상 몽골 방문…물류 협력 논의할 듯(3/10,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강종관 북한 육해운상이 10일 몽골을 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떠났고 곽일룡 육해운성 부상과 주북 몽골 대사관 직원들이 비행장에서 강 육해운상을 배웅했다고 보도함.
- 북한 대표단, 시리아 대통령 면담…반미투쟁 강조(3/10, 조선중앙통신)
 - 시리아를 방문 중인 북한 외무성 대표단(단장 신흥철 부상)이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면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함.
 - 통신은 알아사드 대통령이 "두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미국과 추종세력에 반대해 굴함 없이 싸워나가고 있다"며 반미투쟁을 통한 양국의 우호를 강조했음을 전함.
- 북한 외무상, 벨라루스 방문 마무리…"경협확대 합의"(3/12,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벨라루스는 리수용 외무상의 벨라루스 방문을 계기로 경제를 비롯한

-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함.
- 통신은 12일 리 외무상의 지난 9~11일 벨라루스 방문과 관련해 북한과 벨라루스가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며 그 전문을 공개함.
 - 공동보도문은 양국이 "경제 분야를 포함해 쌍무협조 관계를 적극 확대해나갈 데 대해 견해의 일치를 봤다"고 밝힘.

- 北 교예배우들, 3월 8일 제4차 휘케라스 국제교예축전(스페인) 참가 후 귀환(3.8,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 백서(3.9)】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 등을 거론 미국이 '수많은 핵 무기들을 끌어들이 세계 최대의 핵전초기지, 핵전쟁 발원지로 전략시키고 핵위협을 일삼아왔다'며 'KF/FE 중단' 및 침략무력을 걷어 철수할 것'을 주장(3.9,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해군, 이지스 탄도미사일방위체계 시험 진행' 등 관련 '미국의 군사력강화책동은 쇠퇴몰락하고 있는 저들의 세계지배체제를 유지해 보려는 필사적 몸부림'이라고 비난(3.9, 중앙통신·민주조선)
- 北, KF/FE 실시를 비난하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3.1)과 외무성 대변인 담화(3.2)를 3월 6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건 S/2015/156호로 배포(3.9, 중앙통신)
- 김영남, 3월 9일 駐北 러시아 신임 대사(알렉산드르 마체고라)에게서 신임장 접수 및 담화(3.9,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정부대표단(단장: 리수용 외무상), 3월 8일 벨라루시의 수도 민스크 도착(3.9,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과 러시아, 상호 합의에 따라 올해를 두 나라 사이의 '친선의 해'로 선포(3.11,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 3월 1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주북 시리아 대사(따맘 솔레이만) 신임장 접수 및 담화(3.10,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육해운성대표단(단장 : 강중관 육해운상), 3월 10일 몽골 방문차 평양 출발(3.10, 중앙방송·중앙통신)
- 평양 시내 여성 노인들과 주북 대사관·국제기구 대표부 여성들 친선모임, 3월 10일 리철희(연로자보호연맹 부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3.10, 중앙통신·중앙방송)
- 韓美 합동군사연습(키 리졸브·독수리)은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연습'이라며 '전쟁억제력 강화만이 미국의 전쟁위협을 막는 결정적 수단'이라고 주장(3.10, 중앙통신·노동신문)
- 최근 美 국립 문서기록관리청에서 발굴한 '일본군 포로심문보고서' 내용(일본이 태평양 전쟁 때 강제 동원한 위안부는 모두 조선인) 관련 '일본군 성노예 범죄의 진상이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며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일본이 절대로 회피할 수 없는 법적·도덕적 의무'라고 강조(3.10, 중앙통신·민주조선)
- 미국은 지금까지 '조미대화의 문을 아예 막아버린 장본인'으로 미국의 對北 대화 언급은 "대화의 간판을 들고 시간을 보내다가 기회를 보아 우리(北)를 군사적으로 압살하자는 것"이라고 주장(3.11, 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과 서방의 '北인권문제 제기'는 "우리(北)의 사회주의 제도를 압살하는데 목적을 둔 인권분야에서의 일대사기극"이라고 신동혁(탈북자)의 증언 반복 등을 거론하며 유엔의 '북인권결의' 배경(3.11, 중앙통신)
- 최근 공개된 태평양전쟁 당시 연합군의 일본군 포로신문 자료는 "일제의 성노예범죄를 자료적으로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일본의 '과거범죄 인정·사죄 및 배상' 촉구(3.11,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3월 6일 모리셔스 대통령(자즈케쉬우르 푸랴그)에게 '모리셔스 독립' 47주년 축전(3.11,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인권문제 관련 '미국이 공화국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파괴하고 힘으로 압살하려다가 참패만 가져오게 되자 비열한 인권소동에 매여달리고 있다'며 '누구의 인권문제를 입에 올리기 전에 저들의 인권유린행위부터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3.12, 중앙통신·노동신문·평양방송)
- 北 정부대표단(단장: 리수용 외무상), 3월 12일 벨라루스 방문에 대한 공동보도문(3.12, 중앙통신·중앙방송)
- '노동당의 선군정치, 병진노선은 그 어떤 정세변화나 관계구도 형성에도 변함없이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위력한 정치방식, 전략적 노선'이라며 '우리(北)의 전략적 선택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3.13,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일화, 몽골 국제화초전시회 1등 수상(3.14, 중앙통신)
- 美 오바마 대통령과 국무장관 등 행정부 고위인사들의 '키 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연습 강행 등 對北정책에 대해 "정신병자들, 히틀러와 그의 하수인들"이라고 신랄히 비난 및 "무서운 참변을 미국 본토에서 맛보게 해줄 것"이라고 위협(3.14, 중앙통신·노동신문)
- 러시아 극동 국립인문종합대학에서 3월 10일 북한 도서(김일성·김정일·김정은 저작 및 북한 소개 화첩 등) 기증식 진행(3.14, 평양방송)
- 평양장애자교류단, 2.20~3.2 영국과 프랑스에서 공연 진행(3.15, 중앙통신)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전용기 타고 공군부대 시찰(3/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9일 "김정은 동지께서 '오중흡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6부대를 시찰했다"고 밝힘.
 - 통신에 따르면 이날 시찰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조정철 군 보위사령관, 리병철 노동당 제1부부장, 손철주 공군 정치위원이 수행함.
 - 매체는 김 제1비서가 작전비행장에 착륙한 전용기에서 내리자 군부대 지휘관들이 영접했다고 밝혀 그가 이번 시찰에도 전용기를 이용했음을 보여주며 "작전비행장에는 미제 침략자들과 즐겨 무리들을 쓸어버릴 원수 격멸의 의지가 용암처럼

림 끊어버리고 있었다"며 비행사들이 출격 태세에 있음을 강조함.

- 북한 김정은, 김여정과 동해안 섬 초소 시찰(3/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정은 동지께서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 있는 신도방 어중대를 시찰했다"며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 동지가 동행했고 김여정을 제외한 다른 간부들은 동행하지 않았다고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이 훈련실과 초소 등을 돌아보고는 "해상으로 달려드는 적들을 철저히 소멸할데 대한 당의 군사전략적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섬방어대들에 강력한 화력타격수단을 더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음을 전함.

- 북한 김정은, 동해 원양어업기지 건설장 시찰(3/1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동해안의 원양어업기지인 '5월27일수산사업소' 건설 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함.
 - 통신은 5월27일수산사업소가 "처음으로 건설되는 현대적인 원양수산사업소"라며 총면적 5만5천140여㎡에 부두, 방파제, 수산물 냉동시설, 가공장, 합숙, 문화회관 등을 갖춘 "방대한 건설 대상"이라고 설명함.
 - 건설장을 둘러본 김 제1위원장은 5월27일수산사업소 건설이 주민 식생활뿐 아니라 군인 복지를 개선해 '싸움 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지난달 23일(보도 날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관련 문제가 결정됐다고 밝힘.
 - 그는 "5월27일수산사업소 건설이 끝난 즉시 먼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식의 원양어업 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지금부터 짜고들어야 한다"고 독려함.
 - 김 제1위원장의 이번 현지지도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정관 인민무력부 부부장이 수행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북한 최룡해,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위원' 강등(3/9, 노동신문, 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9일 3·8 국제부녀절 중앙보고대회 소식을 전하며 보고자로 나선

최룡해 당비서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소개함.

- 연합뉴스도 최 당비서는 지난달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 중앙보고대회 당시 공식 매체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호명돼 최근 상무위원에서 위원으로 강등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매체는 최룡해 당비서가 작년 10월 이후 공식 매체에서 줄곧 황 총정치국장보다 먼저 호명됐으나 지난달 28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황 총정치국장 바로 다음에 호명됐다고 덧붙임.

■ 北외무상 인권이사회 참석때 외무성 부상은 인권이사국 순방(3/15,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에서 시리아에 방문했다고 밝힌 신흥철 북한 외무성 부상은 시리아 방문에 앞서 아프리카의 케냐, 에티오피아, 코트디부아르를 순방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함.

다. 공식 행사

■ 북한, 내각 전원 확대회의... '주민생활 향상' 논의(3/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주민생활 향상 지시를 집행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함.
- 통신은 14일 박봉주 내각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으나, 회의 일시와 장소는 공개되지 않음.
- 이번 회의에서는 김 제1위원장이 지난달 1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내린 '결론'을 집행할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으며, 김 제1위원장은 회의에서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것은 장군님(김정일)의 유훈 중의 유훈"이라며 주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움.
-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박봉주 총리와 토론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주민생활 향상에서 큰 진전이 이뤄졌지만 "끝장을 볼 때까지 일관성있게 내밀지 못하고 중도반단한(중간에 흐지부지된) 문제" 등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지적함.
-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이 지난달 12일 노동당 중앙위와 중앙군사위 명의로 발표한 공동구호의 과업들을 집행하는 방안도 의제로 다뤄짐.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미국 압력과 제재에 맞선 '자력갱생' 독려(3/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공동구호의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 하자'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자력갱생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투쟁 전략"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환장이 된 미제는 정치군사적 압력과 함께 경제적 제재 봉쇄 책동을 어느 때보다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다"며 미국의 정책적 목표는 북한의 사상을 거세하고 제도를 허무는 것이라고 주장함.
 - 이어 "남의 힘으로 자기를 지키고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면서 자력갱생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지난달 발표된 당중앙위원회·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 구호를 관철해야 한다고 지적함.
- 북한, '당정책 관철' 대대적 촉구... "온 나라 총돌격"(3/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2면 대부분을 할애해 '당정책 신봉자'라는 정론을 싣고 "전당, 전군, 전민이 당정책으로 무장하자"고 주문함.
 - 정론은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직접 방문지도한 평양시버섯공장, 금컵체육인종합 식료공장, 류원신발공장, 원산구두공장, 평양화장품공장 등을 당정책 관철의 표본으로 내세움.
 - 신문은 "인민이 당정책 관철의 선구자들을 제일로 존경하며 시대가 그들에게 가장 값높은 명예를 안겨준다"며 이런 '충정과 의리의 인간들'만이 김 제1비서의 '제일 전우'이자 '가장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선전함.

-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6군부대 시찰(3.9, 중앙방송·중앙통신) ※ 김정은, 전용기를 이용해서 군부대 방문
- 김정일 저작('95.3.8, 여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 나가는 힘있는 역량이다) 발표 20주년과 「3.8 국제부녀절(국제여성의 날)」 105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3월 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3.8, 중앙통신·중앙방송)
- 黨·최고인민회의·내각, 2014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등 322개 단위에 "사회주의경쟁 공동순회우승기" 수여(3.8, 중앙방송)
- 제30차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 개막식(홍서헌 총장, 개막사), 3월 9일 현지에서 진행(3.9, 중앙통신)
-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조선혁명의 강력한 추진력이며 불패성의 근본원천'이라며 '모든 김정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해방 70돌과 당창건 70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억세게 싸워나가자'고 호소(3.10,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은의 군부대 시찰과 공장·기업소 등 현지지도를 '천하제일 명장, 불세출의 영도자의 사랑과 헌신의 길'이라고 칭송 및 '충성' 다짐(3.11, 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동해안 전방초소를 지키고 있는 신도방어중대 시찰(3.12, 중앙통신·중앙방송)
- '자력갱생은 조선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백승의 기치'라며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은 당중앙위·당중앙군사위 공동구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자력갱생의 위력을 높이 떨쳐나가야 한다'고 호소(3.13,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은 黨 제1비서, 5월27일수산사업소 건설장 현지지도(3.14, 중앙통신)
-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박봉주(내각 총리/보고) 등 참석(3.14, 중앙통신)
- 평안북도 신의주시에 체육관 새로 건설(3층, 농구·씨름 등 20여개 경기 가능)과 함경남도 함흥시 사포구역의 체육관 개건과 황해남도 재령광산에 체육관·야외경기장 건설 선전(3.14, 중앙통신)
- 3대혁명전시관에서 근로자-청소년학생들에게 최신과학기술 지식 보급 사업 진행 성과(지난 해 57만 6천여 명 관람자들에게 60여만건 과학기술자료 보급 등) 선전(3.14, 중앙통신)

4. 경제

가. 정책 동향

- "시장경제 도입은 했는데"...북한, 부작용 방지책 '고심'(2/2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월 22일 평양발 기사에서 각지 협동농장들에 농민들이 물물교환을 할 수 있는 '구매소'가 있다고 소개함.
 - 신문은 "(협동농장에는) 낮은(싼) 가격의 상품들이 진열된 구매소가 있어 분배된 농산물과 교환할 수 있게 돼있다"며 "농민들이 농산물을 현금화하고 시장에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조선신보는 "(북한 공장들이) 국내에서 생산된 일용품과 식료품 등을 구입해 노임의 일부로서 노동자에게 배급하고 있다"고 소개함.
- 신문은 작년 12월부터 평양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편의점인 '황금별상점'도 시장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국영상점'인 황금별상점이 "시장보다 낮은 상품"을 공급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국영상점을 통한 자금 순환"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함.
- 북한, 은정개발구에 첨단IT 투자 유치 욕심(3/1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평양시 은정구역에 지난해 7월부터 건설 중인 은정개발구 건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첨단IT 개발구로서의 장점을 자세히 소개함.
 - 리문호 은정첨단기술산업회사 부사장은 "나라의 지식경제건설 시범지구로, 동북아지역에서 경쟁력 높은 첨단기술개발구로 만들자는 것이 목표"라며 "은정개발구에 대한 여러 나라 투자자들의 관심은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음을 보도함.

나. 주요 후속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관계

- 중국, 북한 마식령 스키장 리프트 장비 공급 시인(3/1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0일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회사가 마식령 스키장의 스키

리프트 장비와 관련 디자인 서비스를 공급했다고 중국 정부가 전문가 패널에 통보했음을 전함.

- "FIFA, 북한 지원금 배정액의 0.5%만 사용"(3/11,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축구연맹(FIFA)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지난해 계획했던 지원금의 0.5%만 북한에 사용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FIFA를 인용해 보도함.
 - 방송은 FIFA 대변인실이 "지난해 축구와 관련해 북한에 지원된 금액은 약 7천 700달러(한화 865만원)"라며 "지원금은 축구시설 잔디 보수와 청소년·심판 연수 비용"이라고 밝혔음을 전함.
 - 방송은 대변인실이 이어 "북한 축구 인재를 양성하고 시설을 늘리고자 배정한 166만 달러(18억6천만원)를 송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FIFA 본부가 있는 스위스의 대북 제재로 국제금융망을 통해 북한축구연맹에 송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러, 北 나선특구 송전사업 타당성 조사 6월 마무리(3/11, 리아노보스티 통신)
 -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러시아 전력 회사 '라오 에스 보스토크'는 10일(현지시간) 보도문에서 지난달 말 사업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기업으로 발전·송전시설 설계·건설 전문회사인 '텍 모스에네르고'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함.
- 러시아, 북한 나선에 대형 풍력발전소 건설 추진(3/11, 자유아시아방송)
 - 러시아가 북한 나선 경제특구에 대규모 풍력발전소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전함.
 - 방송은 러시아 국영 전력회사인 '라오 에스 보스토크'의 알렉세이 카플룬 부사장이 지난 9일(현지시간) 인테르팍스 통신 등 현지언론에 이같이 말하고 건설예정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나설 계획이며 이번 풍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북한과 러시아가 합의한 나선 특구 전력공급 사업과는 별개로 진행된다고 전함.
- 룩셈부르크, 북한 결핵·간염 환자에 10만달러 지원(3/12, 미국의소리)
 - 룩셈부르크 정부가 북한의 결핵과 간염 환자를 돕기 위해 10만달러(한화 1억1천

여만원)를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함.

- 방송은 가톨릭 구호단체 '카리타스 룩셈부르크' 관계자의 이메일을 인용해 "정부로부터 올해 초 북한 지원사업 예산을 받았다"며 "이 자금으로 강원도 결핵과 간염 환자들에게 영양·위생 물품을 제공하고 전문병원 재건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러시아 정부, 평양 상품전람회 참가기업 직접 모집(3/12, 미국의소리)

- 러시아 극동개발부가 오는 5월 11~14일 북한에서 열리는 평양 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할 러시아 기업들을 직접 모집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러시아 정부를 인용해 보도함.

■ 오라스콤, 북한 휴대전화사업 수익금 본국송금 불투명(3/13,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3일 지난 2008년 말 북한에 진출한 오라스콤이 2014년 12월 31일 기준 회계감사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렸다면 이 보고서는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딜로이트가 분석한 것이라고 소개함.
-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오라스콤이 대주주로 있는 북한 휴대전화 회사 고려링크의 현금 잔고는 지난해 6월 말 4억8천500만달러에서 9월 말 5억900만달러, 12월 말 5억4천800만달러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 오라스콤은 북한에서 거둬들인 수익을 외화로 바꿔 본국으로 송금하는 문제를 북한 측과 논의하고 있음.
- 문제는 벌어들인 북한 돈을 외화로 환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북한의 공식 환율과는 달리 암시장 환율은 80배를 넘어 어떤 환율을 적용할지가 미지수기 때문이라고 방송은 덧붙였다.

- 허병철(조선국제전람회 사장), 올해 봄(5.11~14)·가을(9.21~24) 평양국제상품전람회 개최 예고 및 "대외경제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국가정책에 따라 전람회를 통한 교류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언(3.11, 중앙통신)
- 北, 왕가물로 인해 올해 농사에 사용할 관개용수 확보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십개의 저수지 새로 건설 등(우물 : 6,600여개·골포 : 6,000여개·보막이 : 4,500여개 등) "물확보 시설" 마련(3.11, 중앙방송)
- 평안북도, 압록강 기슭에 육아원·애육원 건설(3.13, 중앙방송)
- 北, 신발공업부문에서 새 제품개발을 위한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여 신발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의 혁신적 성과 이룩 선전(3.15, 평양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북한 외국인 관광 재개...중국 여행열차 첫 입북(3/9, 신화통신)
 - 신화통신은 3일 평양발 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 내렸던 외국인 입국 차단 조치를 최근 해제하면서 중국 여행 열차가 9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운행을 재개했음을 보도함.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사망 위로금도 '꿀꺽'"(3/1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10일 공개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실태 증언을 담은 보고서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과 인권실태'를 인용해 해외 파견 노동자의 단속과 검열실태를 보도함.

- 뉴스는 해외에 파견됐던 탈북자들은 대부분 임금 착취 문제를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로 꼽았다고 전하며 1995년 러시아에서 일했던 한 노동자는 "100달러를 받는다고 하면 이중 90달러는 북한 당국이 다 빼간다. 그나마 나머지 10달러도 변변히 받지 못한다"고 증언했음을 덧붙임.

마. 사회 동향

- 북한 여자축구 신화들 '초병체육단'서 유망주 양성(3/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9일 북한 여자축구 선수 리금숙, 리은숙의 과거 활약상을 재조명하고 그들이 감독을 맡은 '초병체육단'을 소개함.
- 북한도 어린이 '독서력' 강조...속독 교재 출판(3/1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조선출판물수출입사가 속독 훈련 교재인 '두뇌개발속독'을 출판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교재가 '기초편', '어린이용', '속셈편', '기억편', '독서편 1·2' 등 모두 6권으로 구성돼 사실상 아동의 기초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전분야를 망라했다고 전함.

- 보건성 중앙위생방역소,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증을 비롯한 여러 전염병의 침습을 막기 위한 사업 강화 보도(3.9, 중앙통신)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북핵위협 고조' 잇따르는 경고음…오바마, 흔들릴까 (03/09, 연합뉴스)
 - 미국 노틸러스연구소의 피터 헤이즈 소장과 로저 카바조스 연구원은 최근 펴낸 '북한의 핵군사력 로드맵: 어려운 선택'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갈수록 증강되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한국을 향해 강압적인 핵위협(Nuclear Threat)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함.
 -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미사일과 핵탄두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해 위협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힘.
 - 동시에 보고서는 "북한이 추가 핵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위해 북한의 의도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태도를 바꾸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함.

- "북한, 적어도 몇달내 핵실험 재개 없을 듯" <38노스> (03/11, 연합뉴스)
 -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의 핵실험장과 평안북도 동창리의 로켓 발사장에서 최근까지 뚜렷한 움직임이 발견되지 않았고, 앞으로 적어도 몇 달 안에는 북한이 핵실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10일(현지시간) 밝힘.
 - 38노스의 잭 리우 연구원과 닉 한센 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상업용 위성으로 촬영한 풍계리 지역 사진을 이전 사진들과 대조했을 때 서쪽 갭도 입구에서 흙더미의 변화나 새 바퀴자국 같이 굴착활동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함.
 - 38노스 연구원들은 이런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동창리 로켓 발사장에서 "겨울철에 맞춘 유지보수 활동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지도부가 지시하면 언제든지(핵실험 또는 로켓발사) 진행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다고 여겨지지만, 그럴 준비를 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함.

- 미 ISIS 소장 "2020년 북한 핵무기 60%가 우라늄탄" (03/15, 연합뉴스)
 - 미국의 북핵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2020년이면 북한이 보유한 전체 핵무기의 60%가 고농축 우라늄(HEU)에 기반한 핵폭탄이 될 것이라고 분석함.
 - 이에 우라늄탄은 플루토늄탄에 비해 은닉과 분산, 운반이 쉬운데다 제조 과정도 손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북핵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아울러 그는 그러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문제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음 정권에서나 북핵문제 해결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나. 미·북 관계

- "오바마, 북한과 '쿠비판 국교정상화' 추진? (03/12, 연합뉴스)
 - 미국 보수언론인 워싱턴타임스의 블로거인 '인사이드 더 링'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궁극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은밀히 북한과 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함.
 - 인사이드 더 링은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의 막후 대북대화 채널은 한국으로 인해 훨씬 복잡해보인다"며 "한국 정부가 중국과 북한의 핵협상 재개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이에 대해 버나렛 미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비밀 대화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고 "우리는 이미 북한과 소통채널을 갖고 있으며 대화에 열려있다"며 "그러나 대화는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함.

다. 중·북 관계

- 북한 외국인 관광 재개...중국 여행열차 첫 입북 (03/09, 연합뉴스)
 - 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 내렸던 외국인 입국 차단 조치를 최근 해제하면서 중국 여행 열차가 9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운행을 재개함.
 - 아울러 북한은 최근 에볼라로 인한 입국 차단 조치를 해제하면서 단둥(丹東)-신의주, 훈춘(琿春)-나선 등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양국 주요 국경 출입국사무소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기로 함.

- 중국, 북한 마식령 스키장 리프트 장비 공급 시인 (03/10, 연합뉴스)
 - 10일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국 회사가 마식령 스키장의 스키 리프트 장비와 관련 디자인 서비스를 공급했다고 전문가 패널에 통보함.
 - 마식령 스키장은 2013년 12월31일 공식 개장했으며 스키장 조성 당시 북한은 유엔의 결의안에 따른 주요 국가의 사치품 금수조치로 리프트 설비 등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음.
 - 중국은 자국 기업이 마식령 스키장에 리프트 등을 공급한 것에 대해 "스키는 인민을 위한 대중 스포츠로 리프트 및 관련 서비스는 금수 대상 사치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시진핑, 북중러 변경지대 협력 강화 주문 (03/10,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9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 지린성 대표단 심의에 참석하여 '동북 3성' 지역들에 "주변국 및 지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함.
 - 이어 그는 "동북지역은 이제 다시는 공업이라는 기둥 하나가 하늘을 떠받치고, 구조가 단일한 '이인전'(二人轉·동북 3성 일대에서 유행하는 지방전통극)을 연출해서는 안 된다"며 산업 다각화도 지시함.
 - 시 주석의 이런 발언들은 동북 지방정부들에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도 해석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변경지역 개방 확대, 국제 경제벨트 구축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됨.

- 중국, 북한 미사일 발사에 "국면완화 행동" 촉구 (03/13, 연합뉴스)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로부터 1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우리는 현 상황에서 각 국가가 국면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한편 우리 군은 이날 북한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키 리졸브(KR) 연습 종료 전날인 12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SA계열의 지대공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밝혔음.

- 북한 접경 중국도시들, 한국·러시아로 경협 눈길 돌려 (03/11, 연합뉴스)
 - 중국 최대 국경도시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는 11일 성(省)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단둥을 한국과 연결되는 중국 동북3성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공식 발표함.
 - 단둥시는 "한중 FTA를 계기로 서해로 통하는 항만을 갖춘 단둥은 한국과의 상품·서비스 교역이 대폭 증대되고 많은 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FTA로 대부분 상품의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의 보하이(渤海·발해)와 서해 북부 연안, 한국을 포괄하는 초국경 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최근 북·중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이 부진해지자 북한과 접경한 중국 국경도시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경협 파트너로 한국과 러시아를 주목하는 현상의 결과로 분석됨.

라. 일·북 관계

- 일본, 대북 독자 제재 조치 2년 연장할 듯 (03/12,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다음 달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금지,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를 2년 연장하는 방침을 자민당에 정식 제시함.
 - 일본은 작년 7월 북한이 일본인 납북 피해자들을 재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인적 왕래와 대북 송금 등 일부 제재를 완화했었음.
 - 그러나 북한이 지난 2일에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북한 측이 아직도 납북자 재조사 결과를 통보해주지 않자 현재의 독자

적인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키로 결정함.

- 인니 부통령, 북한-일본 관계 중재 용의 밝혀 (03/15, 연합뉴스)
 - 유엔 세계재해위험경감회의 참석차 일본 센다이(仙台)를 방문한 칼라 부통령은 14일(현지시간) 교도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일본 등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가 중재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 그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할 것인지에 관한 물음에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북한 측이 "참석을 열망하고 있다"(eager to come)고 밝힘.

마. 러·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기타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리퍼트 "한미동맹 더 튼튼해질 것"...윤병세 병문안 (03/09,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병문안 하고 기자들과 만나 "리퍼트 대사가 아주 좋은 상태로 조만간 퇴원할 것 같다"고 전함.
 - 윤 장관은 "앞으로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한미동맹, 어떤 위기도 도전도 극복해낼 수 있는 한미동맹을 위해 다시 일하자고 얘기했다"면서 "리퍼트 대사가 보여준 용기와 의연함을 한국 국민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함.
 - 또한 윤 장관은 "미측은 우리가 취한 모든 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보인 반응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이 튼튼하다, 빛이 들어올 구멍도 없이 단단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함.

- 미 국무부 "한국정부 리퍼트 피습 수사에 긴밀 협력" (03/10,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과 관련해 "현재 한국 경찰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우리는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힘.
 - 쟈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한다"며 사키 대변인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너무 앞서가는 질문"이라며 "조사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할 것이며 범행 동기를 추측하지 않겠다"고 밝힘.
 - 이어 그는 "리퍼트 대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비롯해 한국과 미국 친구들이 보여준 걱정과 지원의 메시지들에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표했다"고 전함.

- 미 국방·국무, 다음달 잇따라 방한할 듯 (03/12, 연합뉴스)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이 다음 달 한국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워싱턴 소식통들이 11일 전함.
 - 카터 장관은 이번 첫 방한에서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를 통한 강력한 대북 억지를 재확인할 가능성이 커 보이며 케리 장관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등을 계기로 양국 동맹관계를 새롭게 점검하고 박 대통령 방미에 앞서 폭넓은 양자 현안들을 협의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이번 방한 계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미국 정부의 정리된 입장이 제시될지 주목됨.

- 허쉬 USTR 대표보 "한국, TPP에서 중요한 역할 기대" (03/13, 연합뉴스)
 - 브루스 허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1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주최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주년 기념 콘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에서 핵심역할을 하듯이 향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함.

- 그는 또 "무역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미 관세당국 간 대화가 현재 진행 중인 것이 단적인 사례"라며 "이 대화는 한미 FTA가 올바른 궤도로 나갈 수 있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임.
 - 아울러 이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한미 FTA가 발효 3주년을 맞아 정상궤도에 올라섰으며, 향후 한층 원활한 이행을 위해 쟁점 사안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평가함.
- "한반도 유사시 호주배치 미 해병대 신속 투입" (03/14, 연합뉴스)
- 미국 의회에 따르면 케네스 글루크 미국 해병대전투발전사령관은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원회 해양전력 소위에 출석해 "한반도 유사시 태평양 전장에서 활동 중인 해병대 병력을 '전략수송'(strategic lift)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힘.
 -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전개되는 미 제3해병기동원정군(III-MEF) 사령관을 지낸 글루크 사령관은 "일차로 투입되는 것은 오키나와의 제31해병원정부대이며 호주 다윈에 배치된 해병대도 C17 전략수송기를 이용해 한반도로 오게 된다"고 밝힘.
 - 또한 그는 다윈에서 한반도까지의 전략수송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 "약 48시간의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전함.

나. 한·중 관계

- "중국, 한국에 사드 포기 대가 경제 인센티브 제안" <美보수매체> (03/09, 연합뉴스)
- 미국의 보수 성향 군사전문 온라인매체인 워싱턴 프리 비컨은 9일(현지시간)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국의 사드 배치계획을 허용하지 말 것을 호소하면서 한국에 무역과 경제교류를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주장함.
 - 미국의 한 관리는 이 매체에 "중국은 한국을 이용해 1950년대 이래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의 코너스톤인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키고 일본의 제국주의와 과거 사에 대한 선전을 통해 반일감정을 조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함.
 - 국무부 관리 출신의 존 타식은 "중국이 미국과 한국을 갈라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건전한 비판주의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

하고 "다만 한국의 대규모 대중(對中) 투자는 중국의 경제적 압력이 증가되는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함.

- **한중 인적교류 급증...주중공관 1~2월 비자발급 50%↑ (03/09, 연합뉴스)**
 - 주중한국대사관은 9일 올해 1~2월 중국내 전체 공관에서 사증(비자)을 발급받은 중국인은 전년 동기보다 50%가량 늘어난 49만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 특히 베이징(北京)에서 춘제(春節·중국의 설)가 있었던 2월 비자를 발급받은 중국인은 전년 2월에 비해 2배로 늘어났으며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칭다오(靑島)와 광저우(廣州)에서 비자신청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비자발급 적체를 해소하고 신청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임.
 - 양국이 올해와 2016년을 각각 '중국 관광의 해'와 '한국 관광의 해'로 지정한데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도 타결된 상황이어서 인적교류의 확대 추세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 **부산에 나란히 앉은 한국-중국 위안부 소녀상 건립 (03/12, 연합뉴스)**
 - 부산 평화의 소녀상 유치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오는 광복절에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만든 위안부 소녀상 건립식을 열 계획이라고 12일 밝힘.
 - 중국 위안부 소녀상은 중국 칭화대에서 만들어 한국으로 들여오게 되며 추진위는 한국과 중국의 소녀상을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나 부산시민공원 중 1곳에 설치할 예정임.
 - 중국 민간단체는 지난해 12월 중국 남경대학살을 소재한 영화를 만들어 개봉한 데 이어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소녀상을 만드는 과정을 영화로 제작해 소녀상 제막 시점에 맞춰 공개할 예정임.

- **중국 외교부, '한중일 정상회담' 가능성 언급 회피 (03/12,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 일본이 이달 말 열리는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12일 "관련 정보가 없다"며 언급을 회피함.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의 중국 대표인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이 "이번 외교장관 회담은 중단된 지 2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중국은 3국이 적극적 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문제를 회피하지

- 않는 정신으로 외교장관 회담을 잘 치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함.
- 홍 대변인은 그러나 '외교장관 회담 의제에 3국 정상회담이 포함됐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에는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서는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정보가 없다"고 대답함.

■ 中 류젠차오 15일 방한...한중 차관보간 업무 협의 (03/12, 연합뉴스)

-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에서 한반도 및 아시아 업무를 담당하는 류젠차오(劉建超) 부장조리(차관보급)가 15~18일 방한하여 16일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 북한·북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정세, 한중 관계, 지역·국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한다고 밝힘.
- 이 과정에서 여당 일각에서 공론화 움직임이 사드(THAAD)에 대한 중국의 우려 입장을 재차 전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일본 과거사 문제와 관련, 9월 중국이 개최하는 '제2차 세계대전 및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우리 정상의 참석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됨.

다. 한·일 관계

■ 김희정 장관 "日, 위안부 문제 인정·사과·반성교육 해야" (03/10 연합뉴스)

-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광복 70주년이자 유엔 창설 70주년인 올해에는 반드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함.
- 아울러 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해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후대에 올바른 역사교육을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역설함.

■ 한일 정·관·재계 원로급 인사 22일 도쿄서 회동 (03/12 연합뉴스)

- 김수한 전 국회의장과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일본 총리 등 양국 원로급 인사들이 22~23일 도쿄에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학계에 따르면 김 전 국회의장, 이홍구 전 총리, 이승윤 전 부총리,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등은 일본 정·재계 인사가 참여하는 가칭 '한일 현인(賢人)회의'를 열기 위해 22일 일본을 방문함.

- 이 모임에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총리가 모임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며 한국 측 방문자가 이번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면담할지는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짐.

■ 한일, 16일 서울서 軍위안부 7차 국장급 협의 (03/13 연합뉴스)

- 외교부는 한일 양국이 16일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7차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으며 지난 1월19일 이후 거의 2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협의에 우리 측에서는 이상덕 동북아시아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대표로 참석함.
-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본이 과거사 핵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따라서 국장급 협의에서도 도의적인 수준에서의 조치를 거론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논의가 진전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국무회의 결정문에도 '한국과 가치 공유' 명기안해 (03/14 연합뉴스)

- 아사히신문 인터넷판은 13일 일본 정부가 외무성 홈페이지와 총리의 시정연설에 이어 각의(국무회의) 결정문에도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명기하지 않았다고 보도함.
- 일본 정부는 지난달 아베 신조 총리의 시정 연설과 최근 업데이트한 외무성 홈페이지의 한국 관련 설명에서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잇달아 뺐으며 아베 내각은 이날 각의에서 결정한 답변서에서 한국에 대해 "우리나라와 함께 미국의 동맹국으로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를 채용한 나라"라고 표현함.

■ 미 전문가들 "한일관계,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 (03/14 연합뉴스)

-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기업연

구소가 주최한 한일관계 문제 토론회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 "더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미국 국방부에서 아시아·태평양 안보 문제를 담당했던 리처드 로리스 전 부차관보도 지금의 한일 관계에 대해 "강제적이고 지속적인 제3자의 개입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런 행동에 나설 능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라고 주장함.
-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미국 역할론'을 펼치는 이유는 최근 미국이 아시아 중시 정책을 펴는 한편으로 우크라이나 문제나 중동 문제에도 안보 역량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 악화는 곧 미국의 국익을 저해하기 때문임.

■ 고장 난 한일관계... "수교 50년 성과 재평가하자" (03/15 연합뉴스)

- 14일 일본 도쿄 분쿄(文京)구의 도쿄대학 흥고(本郷) 캠퍼스에서 열린 한일수교 50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양국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가 나빠진 양상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위상변화에 각 나라가 적응을 못 하는 게 원인"이라고 분석함.
-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지낸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분단이라는 어려운 조건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한국은 '새우'의 신세에서 벗어나 '돌고래' 정도 위상이 됐는데, 한국은 어떤 때는 새우의 처지에서 문제를 일본의 탓으로 돌리고, 어떤 때는 '고래'가 된 것처럼 일본을 무시한다"고 꼬집음.
- 또한 그는 일본도 과거 국력 면에서 한참 아래였던 한국이 현재 수준으로 성장한 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며, 과거 국력 차가 컸을 때 그냥 넘어갔던 일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미 연준 FOMC 회의록서 드러난 중국경제에 대한 인식 (03/10, 연합뉴스)
 -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주 공개된 연준의 2009년도 FOMC 회의록들을 보면 연준의 중국 경제에 대한 진짜 인식을 엿볼 수 있다고 소개함.
 - 회의록의 내용은 크게 1) 중국 통계를 신뢰하지 않는다, 2) 엄청난 미 국채를 보유한 중국의 민감성을 인식하고 있다, 3) 중국의 리밸런싱 정책 지지하지만 능력은 의심한다, 4)중국 경기부양 효과는 놀랍지만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등임.

- "미·중, 군당국 차원서 '북한 논의'...대화내용 관심 (03/11, 연합뉴스)
 - 10일(현지시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빈센트 브룩스 미국 태평양 육군 사령관은 최근 브루킹스연구소의 자체 블로그인 '혼돈속의 질서'(Order from Chao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문제에 대해 중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논의했다"고 밝힘.
 - 브룩스 사령관은 "우리는 이미 중국과 북한문제에 대해 대화했으며 일본, 한국과도 당연히 논의했다"며 "북한의 행동은 도발적이며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 지난주 브룩스 사령관과 워싱턴 전문가들간의 대화에 참여한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선임연구원은 이날 연합뉴스에 "미국과 중국은 우선적으로 북한의 선택지를 좁히기 위한 방편으로 제재와 압력을 유지할 필요성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분석함.

- 미·중 '아태 안보대화' 첫 개최...북한 논의 관심 (03/12,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11일 미국과 중국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아시아-태평양 안보대화'를 사상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밝힘.
 - 이번 대화에는 미국 측에서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중국 측에서 관유페이(關友飛) 국방부 외사관공실 주임이 참석했으며 구체적인 의제를 소개하지는 않았음.
 - 그러나 펜타곤 주변에서는 이번 대화에서 동북아 안보의 핵심 현안으로 북한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바. 미·일 관계

- 메릴랜드주 상원 교육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 (03/09, 연합뉴스)
 - 미국 메릴랜드주 상원 교육·건강·환경위원회는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중국계 수전 리 의원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주의회 관계자들이 8일 밝힘.
 -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젊은 여성 20만여 명을 아시아와 태평양 섬들에서 일본군의 성노예로 활용할 유일한 목적으로 모집했으며 위안부 생존자들은 집단 강간과 강제 낙태, 굶육, 성폭력을 당해 장애와 영구적인 질병, 죽음, 자살 등으로 이어졌다고 증언했다"고 밝힘.

- 팔레오마베가 "시간 안남았다...아베, 군위안부에 사과하라" (03/11, 연합뉴스)
 - 지난해 정계를 은퇴한 에니 팔레오마베가(72)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이 일본 아베 신조 총리를 향해 "군 위안부 생존자들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사과할 때"라고 지적함.
 - 그는 "아베 총리가 과거 루스벨트 대통령이 연설했던 곳에서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공식사과를 재확약하는 것은 미국 의회뿐만 아니라 미국인들, 위안부 생존자들, 그리고 아시아 주변국에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라고 강조함.

- 아베 외교책사 야치, 15일 방미...정상회담 조율 (03/13,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교 책사'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이 15~18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야치 국장은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복수의 미국 관리와 만나 4월말 또는 5월초에 있을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과 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할 예정이며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대해서도 미측 인사들과 논의할 예정임.

- 미 국무부 '위안부 해결 촉구' 일·대만 전문가 면담 (03/14,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일본과 대만 전문가 등을 워싱턴DC 포기보텀 청사로 불러 면담을 가짐.
 - 이 자리에는 일본인인 와타나베 미나(渡邊美奈) '여성을 위한 전쟁과 평화 자료관' 사무국장과 대만에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벌이는 강수화 '타이베이 여성구조재단' 사무국장,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아시아 폴리시 포인트'의 민디 코틀러 소장 등이 참석함.
 - 외교 소식통은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국무부가 군위안부 전문가, 특히 국교가 단절된 대만의 전문가까지 초청해 의견을 들은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으며 일본 측에 무언의 압박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 일본, 미국 대학에 '돈풀기'...과거사 회석 시도 (03/15, 연합뉴스)
 - 14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의 조지타운 대학과 매사추세츠 주의 MIT 공대는 일본 정부로부터 각각 500만 달러의 자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 국제교류재단인 '재팬 파운데이션'은 미국을 비롯한 해외 6개 대학에 각각 20만 달러가량의 공공외교 자금을 배정할 것으로 알려짐.
 - 이는 일본과의 문화교류 증진과 우호적 대일 여론을 조성하려는 순수한 공공외교 목적을 넘어 전쟁범죄와 군대 위안부 등 과거사를 '세탁'하려는 의도라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음.
 - 한 외교소식통은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의 과거사 공세로 미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고 미국 학계를 겨냥해 본격적으로 역사 수정 움직임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함.

사. 미·러 관계

- "러시아인 80%가 반미...스탈린 시대 이래 최악" (03/09, 연합뉴스)
 - 러시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레바다 첼트르'가 러시아 국민의 80% 이상이 미국에 반감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이러한 반미 정서는 레바다 첼트르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88년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8일 보도함.

-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국가들의 제재조치가 시작된 1년 전부터 러시아 언론이 반미 여론을 주도해 온 가운데 최근 보리스 넴초프 살인사건의 배후에 미국 CIA가 있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면서 반미감정이 더욱 악화된 상황임.
 - 지난 수십 년간 미국에서 러시아 목소리를 대변해 온 언론인 블라디미르 포스너는 "수년 간의 굴욕감을 계기로 러시아 국민이 과거에 찾아보기 어려웠던 반미 정서를 갖게 됐다"고 분석함.
- 미, 발트3국에 군수물자 군사훈련…러시아 견제 (03/10, 연합뉴스)
 - 미국은 9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에 100여점의 군수물자를 제공하는 한편 3천명의 병력을 동원하는 3개월간의 '애틀랜틱 리졸브' 군사훈련에 들어감.
 - 리가 항에서 군수물자 인도를 감독한 존 오코너 소장은 군수물자 인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에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군수물자는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하는 한 계속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전함.
 - 이날 인도된 군수물자에는 에이브럼스 전차, 브레틀리 장갑차, 스카우트 험비 차량 등이 포함됨.
- 북미항공사령관 "러시아 군사활동 확대로 북미 위협" (03/10, 연합뉴스)
 -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윌리엄 고트니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사령관은 12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러시아가 폭격기와 잠수함, 군함에서 발사 가능한 장거리 재래식 크루즈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북미를 방어하는 데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밝힘.
 - 또 그는 유럽 해안지대에서 이뤄지는 러시아군의 정찰비행도 늘었다면서 "러시아의 비행정찰은 부분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한 서방의 정책에 대해 불쾌함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한편 CNN은 러시아의 장거리 크루즈미사일이 재래식인지 핵을 장착했는지를 판별하는 것이 미국의 과제 중 하나라면서 크루즈미사일이 잠수함이나 군함, 폭격기 내부에 실려 있을 때는 정보당국이 핵 장착 여부를 확실히 알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함.

아. 중·일 관계

- "중국, 일본 '잃어버린 20년'서 교훈 배운다" <로이터> (03/09, 연합뉴스)
 - 중국은 일본식의 '잃어버린 20년'을 재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본 실패 교훈' 배우기에 여념이 없다고 로이터가 8일 보도함.
 - 특히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중국 경제에도 디플레 우려가 불거지면서 일본의 과거 정책 실패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더욱 구체화되었음.
 - 중국은 특히 플라자 협정 후 일본 자동차 업계가 환율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 설비를 국외로 이전한 것과, 자본 계정 자유화 후유증인 '핫머니' 충격에 대처하면서 드러낸 허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중국 "일본당국자, 역사문제서 정확한 선택해야" (03/09, 연합뉴스)
 - 중국은 일본을 방문 중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9일 '역사화해'를 촉구한 데 대해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인) 올해와 같은 중요한 해에 일본 당국자가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함.
 - 아울러 "가해자가 상처를 준 책임을 잊지 않으면 앓을수록, 피해자가 과거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더 생기게 된다"라고 말한 발언을 다시 언급하며 "일본 당국자는 이 문제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일본 민간단체, 난징대학살 기념관 참관 (03/12, 연합뉴스)
 -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일본의 '무라야마 담화 계승·발전모임' 대표단이 11일 중국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에 있는 '난징대학살희생동포기념관'을 찾아 참관하고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힘.
 - 이 모임은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당시 총리가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발표한 담화의 정신을 존중하는 일본의 전직 외교관과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민간단체임.
 - 대표단은 베이징(北京)과 난징, 상하이(上海) 등에 있는 중국의 항전 시설을 둘러보고 중국 학자와 당·정 인사들을 만나 역사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일 중국을 방문함.

- “일본인, 안보면에서 한반도 보다 중국 움직임에 관심” (03/09, 연합뉴스)
 - 일본 내각부가 9일 공개한 '자위대·방위문제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평화와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둔 것을 있는 대로 고르라'는 문항에서 60.5%가 '중국 군사력의 근대화 및 해양 활동'을 52.7%가 '한반도 정세를' 꼽음.
 - 이러한 순위 변동은 중국이 국방비를 최근 수년 간 대거 증액하고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동중국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일본인에게 안보 위협 요소로 각인됐음을 시사함.
 - 한편 응답자의 56.8%는 일본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면 자위대에 지원하지는 않지만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위대의 작전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표명함.

자.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차.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국제전략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北 "북한인권소동은 사회주의 압살 사기극"(뉴시스, 3.11)
 - 북한이 11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제기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며 반발했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반공화국 인권소동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는 데 목적을 둔 반인륜 책동으로서 인권분야에서의 일대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음.
 - 통신은 "생존의 기초가 오직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 결정되고 모든 재부가 1%의 독점재벌들의 소유물로 되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의 본질을 반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소멸하는데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고 꼬집었음.
 - 또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병적인 거부감과 체질적인 적대감은 우리의 행복한 현실을 오도하고 모독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하고 있다"며 "우리의 인권을 유린하고 국권을 말살하기 위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범죄는 반드시 결산되고야 말 것"이라고 말했음.

- 북한 애육원도 출신성분 따져 고아 수용(자유아시아방송, 3.11)
 - 최근 평안남도 평성시를 떠나 국경지방에 나온 한 주민 소식통은 "여행도중에 보니 평성시 역전 주변과 순천역전에 음식을 구걸하는 꽃제비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다"고 11일 밝혔음.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새해 첫날 방문지로 평양시 애육원과 육아원을 찾아 물고기 공급을 지시하는 등 고아들에게 관심을 쏟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에 꽃제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임.
 - 이 주민은 "현재 방랑하고 있는 꽃제비 가운데는 신원파악이 안 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애육원이나 육아원에서도 받기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음.
 - 예를 들어 함경북도 청진시 꽃제비가 평안남도 평성에 나와 방랑할 경우, 보안원들이 붙잡아 애육원에 데려다 주어도 아이의 가정 내력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임.
 - 현재 북한에 존재하는 꽃제비들은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이거나 또 가정의

과피되어 유랑하는 아이들, 키우기 어려워 부모가 몰래 버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애육원이나 보육원에서 이들의 신원을 가려 다 돌봐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임.

- 최근 북한 전역에 건설된 애육원, 육아원에서도 출신성분을 고려해 고아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만일 부모의 사망경위가 확인되지 않거나, 부모가 감옥에서 사망한 경우일 때 고아들은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 북 주민들, 나무심기과제에 비난 거세(자유아시아방송, 3.11)

-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죤'은 '식수절'인 3월 2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공군 제447군부대를 찾아 직접 나무를 심는 영상을 크게 보도했음.
- 이날 김정은 제1비서는 나무심기에 군인들이 앞장설 것을 주문했음.
- 하지만 주민들 속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나무심기 과제를 강요하는 당국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고 북수의 함경북도 소식통들은 전했음.
- 11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나무묘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산에서 나무를 떠다가 공장기업소와 도로 주변에 옮겨 심고 있다"며 "나무 1대를 떼오는 과정에서 다른 나무 10대 이상을 죽이고 있다"고 밝혔음.
- 나무는 보통 1.5m 미만의 접비, 분비나무를 심는데 주민지역에서 60~70리 이상 떨어진 산에서 묘목용 나무를 떼와야 한다고 그는 말했음.
- 운반수단은 썰매가 전부인데 한대의 썰매에는 7대 정도의 묘목을 실을 수 있다고 함.
- 특히 나무를 옮겨 심은 다음 버팀목을 3대씩 세워주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산에서 버팀목으로 쓰기에 적당한 어린 나무 3대를 베어 와야 한다는 것임.
- 소식통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나무심기 과제에 대해 주민들은 '1대를 베면 10대를 심자'는 나무심기 구호를 '1대를 심고 10대를 베어버리자'라고 풍자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강조했다.

■ "北시장 매대 3년간 대폭 증가...청진시장 무려 1만2천개"(데일리NK, 3.11)

- 북한 시장 매대(좌판)수가 지난 2012년 이후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음.
- 2012년 12월 기준 혜산시 연봉시장 매대수(인원수)는 755개였으나 현재 1047개로 늘어난 상태이며 위연 시장은 879개에서 1124개로 증가했고 연풍 시장은

392개에서 744개로 늘었음.

- 함경남도 소식통도 "함경남도 북청 시장의 경우도 지난시기보다 매대가 많이 증가했다"면서 "눈에 띄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쌀 매대는 아예 따로 구분돼 있는데, 쌀 장사꾼만 350명이다"고 말했다.
- 매대 증가 배경에 대해 소식통은 "국가가 주민들의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허용한 결과로 인해 장마당 매대 수가 증가한 것이지만 내막은 당국이 장세를 통해 국가 수입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보다 많은 주민들이 장사를 하게 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음.
- 그러면서 소식통은 "시장 매대 수가 늘어난 것만큼 시장관리소는 장세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일부 주민들은 '혜산 농민시장에서 장세로 걷어 들이는 것만 해도 1일 400만 원(북한돈) 이상 되는데 한 달이면 1억이 넘는 돈이다'며 '혜산 시 5개 시장을 통해 몇 억이 되는 돈이 나오는데 국가가 장마당을 허용한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 국무부 "북 장마당 세대, 다양한 외부 매체 접해"(미국의소리, 3.12)

- 미국 국무부가 정부 인터넷 웹사이트인 '쉐어아메리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외부세계 정보를 접하는지 소개했음.
- 국무부는 이 사이트에 '북한의 장마당 세대'란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투옥과 강제노동, 심지어 처형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이 교묘하게 정부의 정보통제를 피하고 있다고 밝혔음.
- 돈이 있으면 라디오와 한국과 서방 영화 DVD, 음악 CD와 MP3, USB, 그리고 다른 휴대용 매체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것임.
- 지난 2011년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 주찬양 씨는 이 웹사이트에 실린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이 모든 주민을 다 통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음.
- 오늘날의 북한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으며, 자신은 북한당국의 선전선동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세대, 이른바 장마당 세대라는 설명임.
- 주 씨는 북한에 있을 때 매일 밤 가족들이 담요를 뒤집어쓰고 라디오를 통해 'VOA' 같은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며, 하루는 라디오 방송에서 먼저 탈북해 한국으로 간 아버지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고 밝혔음.
- 북한의 관영매체들은 북한의 현실을 미화할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에서 자신이 수감됐던 노동교화소에 있던 2천 명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2백 명에

불과했지만 아무도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 북한, 인권문제에 전방위 접촉…인권이사국 개별방문(아주경제, 3.15)
 -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최근 외무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신흥철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을 순방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0일 보도에서 시리아에 방문했다고 밝힌 신흥철 북한 외무성 부상은 시리아 방문에 앞서 아프리카의 케냐, 에티오피아, 코트디부아르를 순방했다고 북수의 정부 소식통이 15일 전했다.
 - 북한 외무성에서 비동맹 외교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흥철 부상이이 찾은 이들 3개국은 모두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임.
 - 신 부상은 이들 국가에서 카운터파트와 만나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표결시 반대표를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임.
 - 신 부상의 순방과 비슷한 시기인 지난 3일(현지시간) 리수용 외무상은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탈북자 신동혁씨의 일부 증언 반복과 관련, "최근 (북한 인권) 조사보고서의 기초가 됐던 핵심증언이 거짓으로 판명돼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반공화국 인권결의들의 허위성이 여지없이 입증됐다"며 결의안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북한 인권

- 野 "4월 국회서 북한인권법 논의 시작하자"(연합뉴스, 3.10)
 -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4월 임시국회에서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음.
 -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북한 인권 관련 5개 법안과 새정치연합이 발의한 3개 북한인권법을 4월 상임위(외교통일위)에서 병합 심의해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음.
 - 그러나 새누리당의 북한인권 관련법에 대해선 "사실상 '북한인권재단 지원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대한 지원을 재단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안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음.

- 새정치연합의 북한인권 관련 입장으로는 "북한은 주민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 등 실질적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런 노력들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앞서 문재인 대표도 지난달 말 비공개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처리에 대해 전향적 태도 변화를 시사한 바 있음.
- BBC, 북한 주민들 위해 라디오 뉴스서비스 계획(라디오코리아, 3.11)
 - 영국 공영방송 BBC가 북한에 대한 라디오 뉴스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전했다.
 - 보도에 따르면 BBC방송 대변인은 BBC 월드 서비스의 핵심 원칙 가운데 하나는 언론 자유가 부족한 국가의 청취자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라며 인터넷 접속 부족과 방송에 대한 엄격한 통제 같은 걸림돌이 있지만,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실행 가능한 뉴스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방송은 영어보다 한국어로 서비스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이나 위성TV 접속이 불가능한 만큼 단파 라디오에 의존할 가능성이 큼.
 - 다만 BBC 한 소식통은 이 계획이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방송 개시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 BBC는 최근 비용 절감을 위해 외국어 방송들을 축소했지만 많은 의원들이 BBC 해외방송이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국가에서 이른바 '소프트 파워'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음.
 - "해외 파견 北노동자 인권문제, 국제사회 주목"(데일리NK, 3.12)
 - 서울에서 어제,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회의가 열렸음.
 - 중국, 러시아, 몽골 뿐 아니라 아프리카 등 40여개 나라들에 어림잡아 4만 6천여 명의 북한노동자들이 나가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해외에서도 조직생활을 통해 통제는 더 강화되고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함.
 -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임금의 대부분을 김정은 정권에게 떼이고 노동환경도 열악하다는 점임.

- 해외에 나가기위해 많은 뇌물을 바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번 돈의 90%는 충성의 자금 명목으로 먼저 떼이고, 노동시간을 초과해서 일해 봤자 그 수당도 모두 현지 간부들 몫임.
 - 손에 쥐는 돈이 적으니 노동시간 외에 또 다른 일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해외에 파견되기 전에 뇌물로 쓴 돈이 있으니, 밤에도, 새벽에도, 휴일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음.
 -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현장 실태를 두고 노예노동이라고 규정했음.
 - 국제법에서 사람의 이동의 자유 제한, 소유권 인정 여부, 강압이나 폭력 등을 고려해서 '노예노동'을 규정함에 따라 북한 당국이 해외에서도 북한인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개소 지연(자유아시아방송, 3.12)
 - 이달 말로 예정된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개소 일정이 올해 2/4분기로 연기됐음.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기욤 파이플레 사무관은 11일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와 한국 정부 간에 아직 최종 의견 조율이 진행 중이며, 인사 채용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지연 사유를 설명했다.
 -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설치에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포함된 권고 사안 중 하나로, 사무소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감시 강화와 기록 유지를 위한 현장 기반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맡음.
 -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해 11월 유엔총회에 제출한 예산보고서에 따르면 현장 사무소에는 총 6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되며, 현장사무소 활동을 총괄할 소장으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의 P-5급 코디네이터 즉 조정관 1명이 배정됨.
 - 그리고 북한 인권 상황을 감시, 분석하고 피해자와 목격자들을 인터뷰해 보고서와 문서 작업을 담당하는 경력 7년 이상의 P-4급 인권담당관 1명, 보고서 작성 지원, 동시통역과 번역 등을 맡는 경력 5년 이상의 P-3급 직원 3명, 이외 행정지원 1명 등이 현장사무소에서 일하게 됨.
 - 영국, 올해도 북한 인권우려국으로 지정(연합뉴스, 3.13)
 - 영국 외교부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2014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

- 에서는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가 극도로 제한돼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을 인권우려국으로 분류했음.
- 보고서는 "지난해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으며, 일부 인권 침해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음.
 - 이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새로운 의제로 채택함으로써 언제든지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됐다"고 평가했음.
 - 영국 정부는 지난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측에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으며 영어교육 사업 등 다양한 대북 지원 활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3. 탈북자

- 북한 해외 근로자 출신 탈북자 유엔서 비공개 증언(코나스넷, 3.11)
 - 엔케이워치가 북한당국이 북한 해외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독재정권을 강화해 주민들을 더욱 통제한다는 심각한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임.
 - 엔케이워치 지난 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및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의 심각성, 특히 북한 해외 근로자 인권실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들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음.
 - 엔케이워치는 12일 북한 해외 근로자 출신 탈북자 13명을 인터뷰하여 작성한 청원서를 유엔 현대판 노예제도에 대한 특별보고관에 제출하는데 있어 실무진들을 만나고 북한 해외 근로자 출신 탈북자 한 명이 직접 특별보고관 사무국에 비공개 증언을 할 예정임.
- "탈북 추정 소년, 스웨덴 추방 위기 모면" 스웨덴 이민법원 추방 재심사(국민일보, 3.11)
 - 스웨덴 이민법원이 강제 복송 위기에 놓였던 탈북 추정 소년을 재심사하도록 판결했다고 11일 보도했음.
 - 스웨덴의 아리도 데가브로 변호사는 중국으로 추방 위기에 놓여 있던 소년이 탈북자라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데 대해 스웨덴 이민 법원이 이민국에 재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 데가브로 변호사는 한국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북한정의연대의 도움으로 한국에 정착한 함경북도 회령 출신 탈북자들의 탄원서 등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스웨덴 이민국의 의뢰를 받은 언어 분석관은 꽃제비의 생활 등 북한의 실태나 지명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소년의 난민 자격 심사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을 받았음.
 - 데가브로 변호사 등은 스웨덴 이민 법원에 이민국의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촉구했음.
 - 한편, 스웨덴 현지에서는 이날 현재까지 소년이 강제 복송되지 않도록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인터넷 서명 운동에 2만1000여명이 동참했음.
- 탈북자 신동혁 다룬 다큐 독일 방송상 수상(연합뉴스, 3.12)
 -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33) 씨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14호 수용소 완전통제구역'(Camp 14)이 독일 방송 분야 최고 권위의 '그림메상'(Grimme Preis)을 받았음.
 - 독일 방송매체 연구소인 그림메 인스티튜트는 올해로 제51회째를 맞은 그림메상 정보문화 부문 수상작으로 이 작품을 선정하고, 오는 27일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소식통들이 12일(현지시간) 전했다.
 -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을 다큐로도 제작한 바 있는 마르크 비제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신 씨의 경험을 애니메이션으로 되살렸음.
 - 이 작품에는 고문, 지하감옥 생활 등 신씨가 수용소에서 겪었다고 주장하는 인권유린 실태가 담겼음.

4. 이산가족

- 특이사항 없음

5. 납북자

- 유엔 北인권특별보고관 “北의 외국인 납치 집중 조명해야”(연합뉴스, 3.13)
 -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9일(현지시간) 북한의 반인도주의적 범죄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의 외국인 납치행위와 강제실종 문제를 집중 조명할 것을 국제사회에 제안했음.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오는 16일 유엔 인권이사회 정식 보고에 앞서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한 북한인권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 제출 이후 북한 당국이 잠시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조하는 듯 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모두 중단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려면 반인도적 범죄 책임자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 북한 요원들이 한 것으로 알려진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난 1950년 이후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납치를 자행해왔고 이들의 본국 송환을 거부해왔다면서 이에 따라 대규모 외국인 강제실종 현상이 빚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러한 납치·강제실종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를 포함해 국제형사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자국민이 납치된 국가들의 수를 보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는 국제사회가 북한 요원들이 자행한 모든 납치와 강제실종 사건을 집중 조명하면서 아직 생존해있는 사람들의 조속한 송환, 사망자 유해 확인, 적절한 보상, 국제법에 따른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함께 북한과 피해 당사국 간의 양자 협상 등을 병행하는 전략도 구사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미국-북한 1월 교역액 14만7천 달러…대부분 지원품목(노컷뉴스, 3.10)
 - 미국과 북한의 지난 1월 교역 규모가 14만7천 달러로 집계됐다고 미국 상무부가 밝혔음.
 - 미국과 북한의 이러한 교역액은 지난해 12월 8만 달러에 비해 한 달 사이에 2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함.
 - 그러나 통계상으로는 수출로 잡혔지만, 대부분 인도적 지원을 위한 품목으로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NAICS 990000)이 13만 달러로 집계됐음.
 - 대북 지원 품목 다음으로는 방사선 의료기기(NAICS 334517)가 16만3천 달러, 수술 의료기기(NAICS 339112)가 3만 달러, 수술용품(NAICS 339113)이 3천 달러를 각각 기록했지만, 이 품목도 대북 지원용일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지난 1월 설탕(NAICS 31131X)이 1만 6천 달러어치 북한에 수출됐음.

- FIFA, 166만 달러 대북지원 중단(자유아시아방송, 3.10)
 - 가난한 나라를 위한 국제축구연맹의 지원 사업이 북한에서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국제축구연맹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축구 인재를 양성하고 시설을 늘리기 위해 배정한 약 166만 달러를 북한으로 송금하지 못하고 있다고 10일 밝혔음.
 - 스위스의 경제부(SECO)와 스위스연방의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은행과 금융거래를 통제하고 핵개발과 불법 행위와 연관됐다고 유엔이 지목한 북한인들의 여행금지 조치를 시행 중임.
 - 국제축구연맹은 2001년 김일성 경기장의 인조 잔디 교체비 45만 달러 지원을 시작으로 지난 14년 동안 약 200만 달러를 지원해 여섯 곳의 축구시설을 개·보수했음.

- 룩셈부르크 정부, 북한 결핵·간염 환자에 8만5천 유로 지원(미국의 소리, 3.13)
 - 룩셈부르크 정부가 가톨릭 인도주의 구호단체인 '카리타스 룩셈부르크'의 북한 지원 사업에 8만5천 유로, 미화 10만 달러를 지원했음.

- 카리타스 룩셈부르크의 안드레아스 보그 국제협력국장은 올해 초 관련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이 자금으로 강원도 내 결핵과 간염 환자들에게 영양과 위생 관련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음.
 - 보그 국장은 또 북한 내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을 재건하고 북한 보건당국과 협력해 환자들이 혹독한 겨울 날씨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 프랑스 NGO, 북한서 130만 달러 규모 영양 개선 사업(미국의 소리, 3.13)
 - 프랑스 구호단체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가 올해 초 북한에서 120만 유로, 미화 130만 달러 규모의 영양 개선 사업을 시작했다.
 - 이 단체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린 자료에서 유럽연합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앞으로 4년 동안 평안북도와 남포에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 사업은 물고기 양식과 작물 재배, 가축 사육을 함께 하는 '통합 양식 기법(Integrated crops-livestock-fish farming system)'을 통해 물고기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임.
 - 이렇게 생산된 물고기는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 등 취약계층 24만여 명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사용됨.
 -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북한 어린이들이 단백질 섭취 부족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사업으로 이런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8. 북한동향

- 【조선법률가위원회 백서(3.3)】 美 주도하의 유엔인권결의안 채택 및 對北제재 등을 거론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소동과 세계 도처에서 일삼고 있는 고문만행·비법적인 제재책등을 폭로한다'며 '美 인권유린범죄행위 폭로 단죄 및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흐름에 합세할 것'을 호소(3.3,중앙통신)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